문재인 정부 600일

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관계부처합동

2019년,
국민이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목차

문재인 정부 600일,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2

Ⅰ. 평화

1.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6

Ⅱ. 국방 · 보훈

2. 튼튼한 국방으로 평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8
3.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9

Ⅲ. 경제

4.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견실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
5.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12
6. 우리 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14
7.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혁신성장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16
8. 일한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18

Ⅳ. 사회

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했습니다 20
10.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22
11. 국민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24
12. 투기는 차단하고, 실수요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은 강화했습니다 26
13. '과로가 있는 삶'을 탈피하고 우리사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8

Ⅴ. 안전

14.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30
15.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2

Ⅵ. 지역

16.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34
17. 지방분권,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36

Ⅶ. 국제

18.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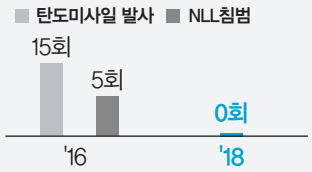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40

소상공인 · 자영업자 맞춤형 대책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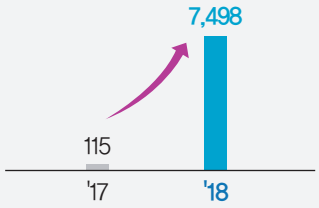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 600일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평화

한반도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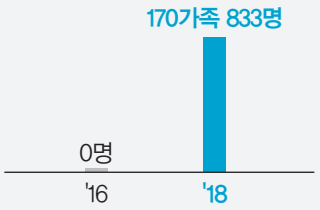
北탄도미사일 발사 및 NLL 침범



남북 왕래 인원(명)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남북공동참가, 아이스하키 단일팀



이산가족 상봉

남북정상회담 3회

판문점 '18.4.27, 5.26, 평양 '18.9.18~20

사상 첫번째 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 '18.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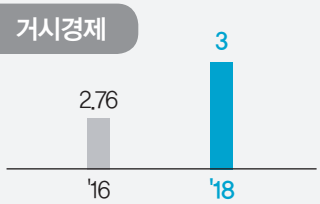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

-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 GP(10개소)시범철수
- 경의선 ·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착공식
- 한반도 생태계 복원 산림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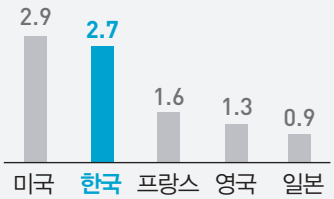
경제

거시경제



1인당 국민소득(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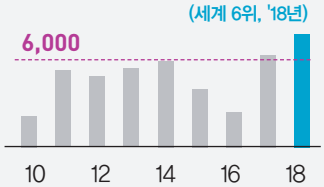
세계 7번째 30-50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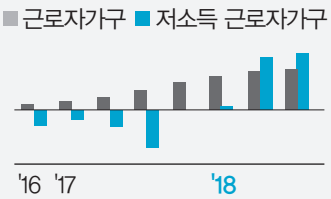
'18년 OECD 주요국 성장률(%)

사상최대 6,052억 달러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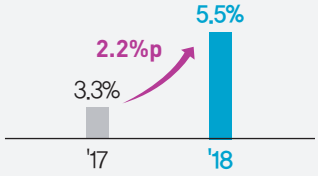
(세계 6위, '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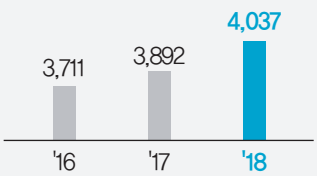
수출금액 추이(억 달러)



가계소득 상승세 (전기비, %)



임금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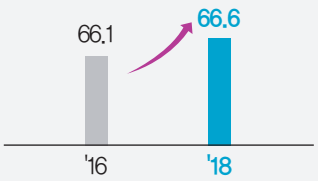


외환보유액(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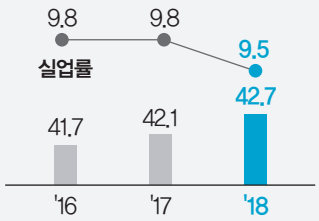
사상 최초 4,000억 달러 돌파(세계 8위)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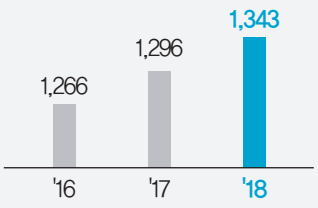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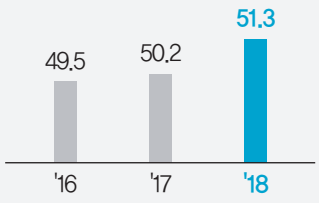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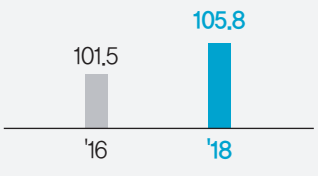
청년(15~29세)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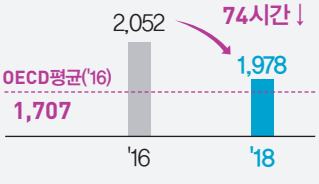
고용보험 가입자 수(만명)



상용직 근로자 비중(%)



노동생산성 향상



'16년 대비 연간노동시간 74시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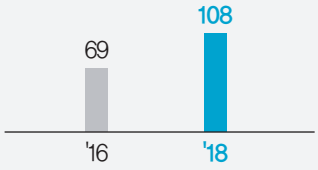
평화

외교 · 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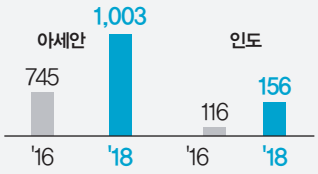
주변 4국과 긴밀한 소통 · 협력 강화

- 긴밀한 한미 공조, 비핵화 및 평화정착 기반 마련
- 양국관계 신뢰회복, 경제협의체 재가동
- 셔틀외교 복원, 진실과 원칙에 입각한 과거사 대응
- 19년만의 국빈 방문, 남북러 삼각협력 등 추진

신북방 신남방 정책, 경제영토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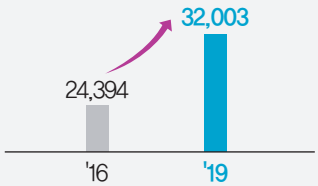


신북방 지역(CIS) 수출액(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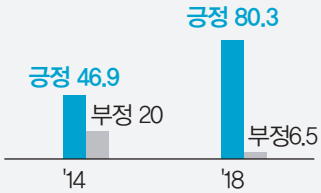


신남방 지역 수출액(억 달러)
역대 최고 실적

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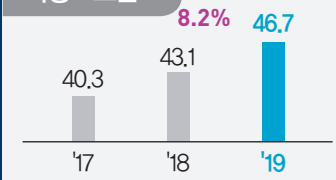
ODA 예산 규모(억원)



외국인이 본 대한민국 이미지(%)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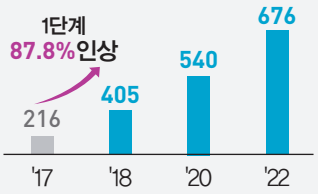
국방 · 보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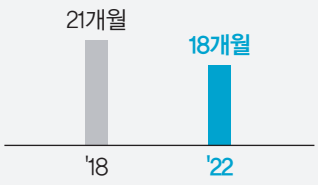
국방예산(조원)

국방개혁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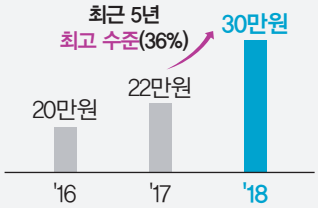
국방 전 분야 체질 개선 추진
방위사업 투명성 강화
전작권 조기전환 여건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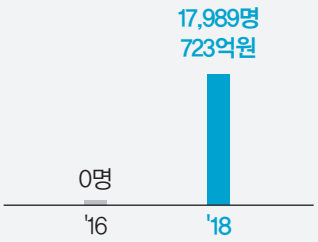
병 봉급 인상(병장기준, 천원)



병 복무기간 단축(육군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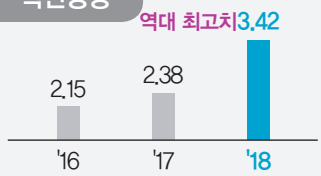
참전 명예 수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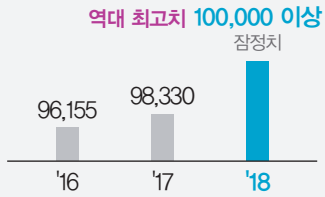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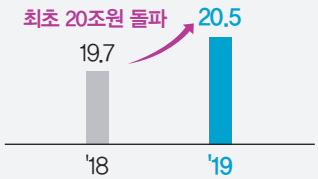
혁신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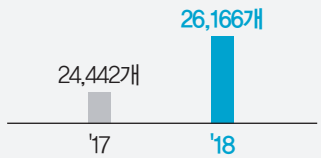
벤처 투자 금액(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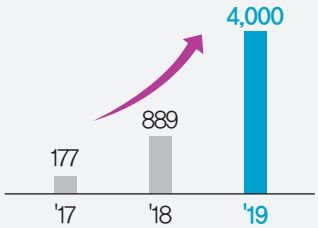
신설 법인 수(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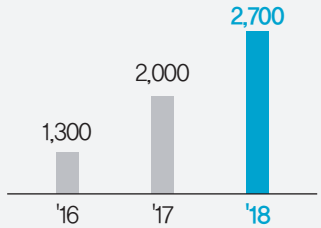
정부 R&D 예산(조원)



청년창업(39세 이하, 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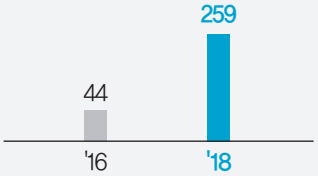


수소차 보급(개, 누적)



AI R&D투자확대(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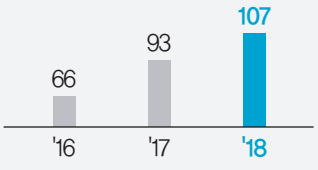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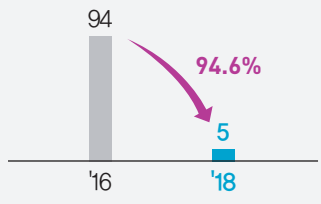
선박수주액(억 달러)
7년만에 세계1위 탈환
(시장점유율 42%, 잠정)

- 세계최초 5G 상용화('18.12월)
- 국내 데이터시장 15조원 돌파
  (전년비 5.6% ↑)
- 바이오헬스 수출 71억 달러
- 독자기술 '누리호' 시험발사체 성공
- 규제샌드박스 도입

공정 · 상생



연간 상생결제액(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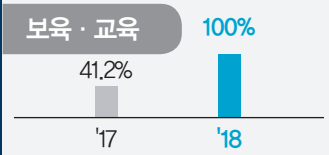
대기업 순환출자 현황(개)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 5년 → 10년
- 환산보증금 상향으로 전체 임차인 90% 보호
- 보증금 ·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 9% → 5%
- 카드수수료 우대 수수료율 적용확대
  (0.8%) 연매출 2 → 3억원 이하, (1.3%) 3 → 5억원 이하
-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제로페이) 시범 실시 '18.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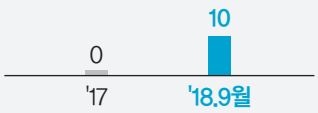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 600일,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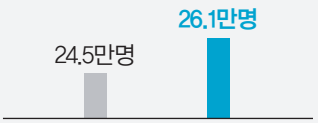
보육 · 교육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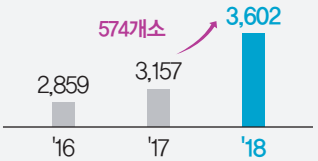
아동수당 지급(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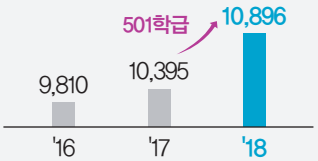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가구



국공립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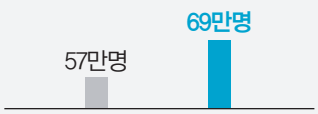
국공립 유치원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133억원,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

(약 582억원, '18년, 22년까지 단계적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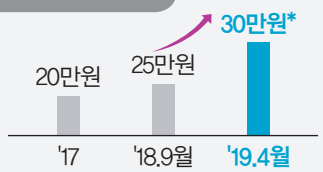


반값등록금 지원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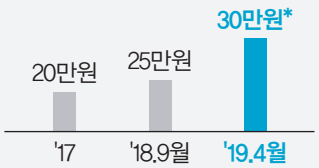
('17) 중위소득 90%이하 → ('18) 120%이하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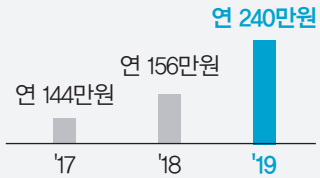
사회복지



기초연금 *소득하위 20%



장애인연금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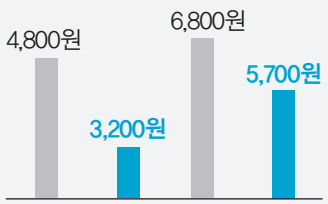
'17, 7.5만명 → '18, 8.3만명 → '19, 11.3만명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혜가구**

'18.12월 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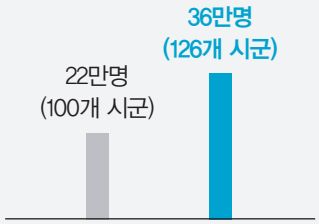
– **1단계** 생계 · 의료급여 : 약 3.4만 가구

– **2단계** 주거 급여 : 약 14만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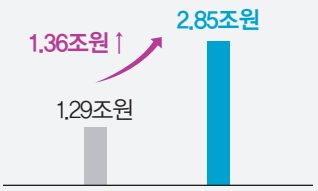
서울외곽 서울 – 춘천

주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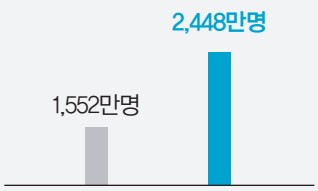


100원 택시 수혜인원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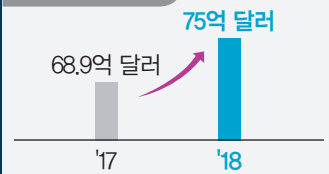
연간 요금할인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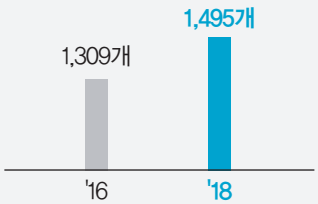
요금할인 가입자 수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20 → 25%)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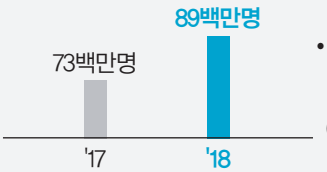
문화콘텐츠



문화콘텐츠 수출액 증가



해외 초 · 중등학교 한국어반 개설



해외한류 동호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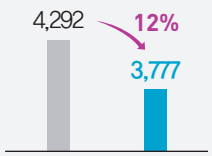
• K-Beauty

세계시장 점유율 9위 / 수출 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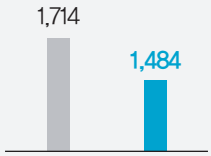
('17년) 세계 100대 기업에 우리 기업 4개 포함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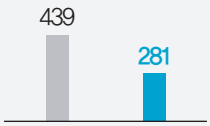
안전사고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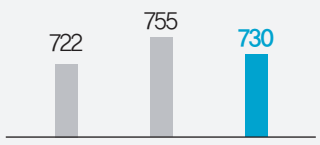
보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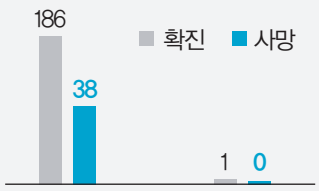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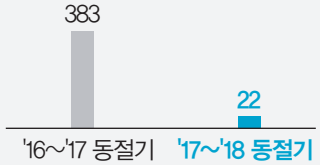
* '18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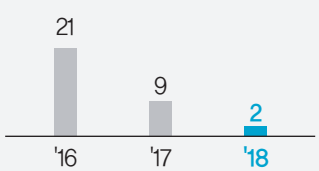
산재 사망자 수



메르스 사망자 수



AI 발생건수



구제역 발생건수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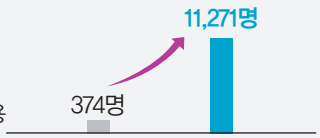
국민건강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대폭 경감

건강보험 적용 (상급종합 기준)	기존	개선
상복부초음파('18.4월)	16만원	6만원
뇌 · 뇌혈관 MRI('18.10월)	66만원	18만원
상급종합 · 종합병원 2 · 3인실('18.7월)	15만원	8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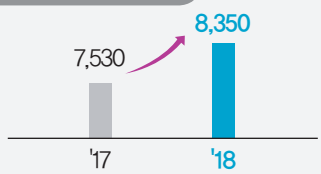
• 65세이상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50% → **30%**

• **치매국가책임제** 본격화
-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신경인지검사 · 영상검사 건강보험 적용
-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지지원등급' 신설('18.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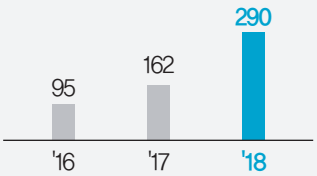


인지지원등급 판정현황

민생 · 주거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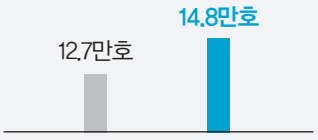
최저임금(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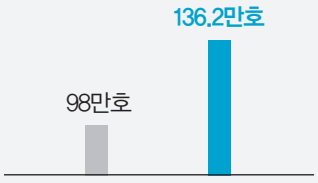
교육급여(천원, 중고등 기준)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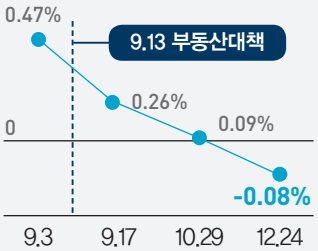
민생 · 주거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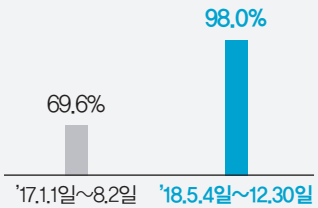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록민간임대주택 확충



주택시장 매매가격 동향(서울)



서울 일반공급 무주택자 당첨자비율

• **청약가점제** 확대, **무주택자 우선추첨** 등 청약제도 개편

• **수도권 신규 공급택지** 개발 추진 30만호

• **규제개선**(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등) 통한 도심내 공급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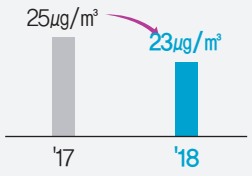
•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 확대

(기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확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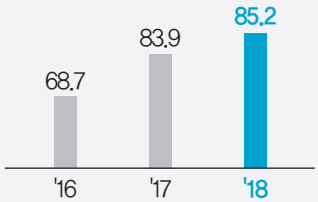
안전

생활안전

• **미세먼지 저감조치**
- 경유차 배출 저감
- 친환경차 확대
- LNG 등 친환경 발전 가격경쟁력 제고
- 봄철(3~6월)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조정 등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16만실, ~'19.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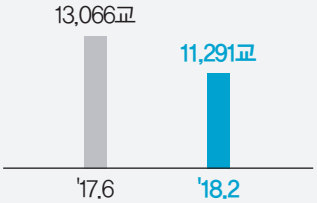


미세먼지(PM2.5) 농도(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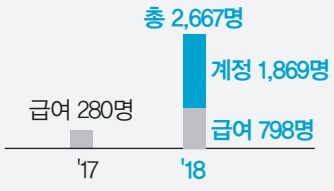


HACCP* 적용식품 생산율(%)

* 식품의 위해요소분석하여 단계별 중점관리



석면건축물 포함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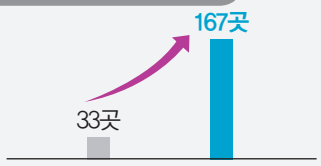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 수

• **계란** 산란일,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 등 표시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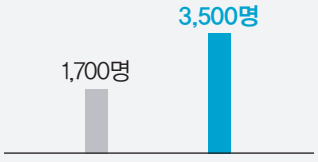
• 24시간 365일 해외안전지킴센터 운영, **우리국민 보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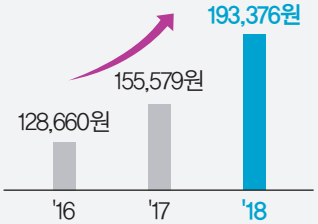
지역경제 · 지방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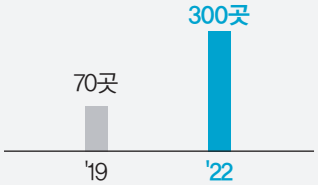
도시재생 뉴딜 사업대상지



청년영농 · 영어정착지원금 신설
(월 100만원 수준)



쌀 산지가격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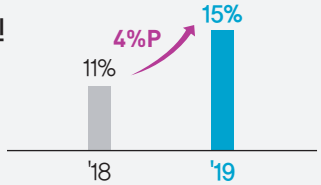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 495개 **생활밀착형 SOC** 사업 추진
'19년 예산, 8.6조원

• **571개** 국가사무 일괄 지방이양

• 추가 조세부담 없이 **지방재정 3.3조원** 확충



지방소비세율 인상

01

비핵화와 평화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3회
11년만에 남북정상회담

1번째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0회 (2018)
北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
NLL 침범 횟수

"지금 한반도는 **세계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구상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냉전질서를 해체**하고
평화와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국빈 환영 리셉션, '18.10.16)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숨가쁜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 베를린 구상('17.7월)과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17.11월)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축에 대한 의지를 천명
- 평창동계올림픽('18.2월)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
-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개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 합의



베를린선언
7월 6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4월 27일, 5월 26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9월 18~20일

2017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2월 9일



북미정상회담
6월 12일



철도 · 도로 현대화 착공식
12월 26일

하늘 · 땅 · 바다에서 총성이 사라졌습니다.

-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군사분야 합의서('18.9.19.)채택
- 상호 적대행위 중지('18.11.1.)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18.10.27.)
- GP 시범 철수('18.12.12.)



평화가 경제입니다.



-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 도로 연결 현대화 착공식('18.12월)

  * 대북제재 감안, 단계적 추진
- 양묘장 현대화 및 산림병해충 공동 대응
- 한강하구 공동 수로 조사 완료('18.11~12월)

"DMZ 평화 관광이 활성화 되고, '18년 외국인 직접 투자가 사상최고치(269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평화의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남북화해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3년만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170가족, 833명의 이산가족 상봉('18.8월)
- 2018 아시아경기대회, 국제대회(농구 · 탁구 등) 공동참가
- 예술단 상호 방문공연
-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 재개



02

튼튼한 국방으로 평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2.0**

국방 전 분야 체질개선 추진 ('18년)

(2018) 21 → (2022) **18** 개월

병 복무기간 단축 (육군기준)

87.8%

병 봉급 인상률 ('18년)

정예화 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국방개혁 2.0'을 마련, 국방 전 분야 체질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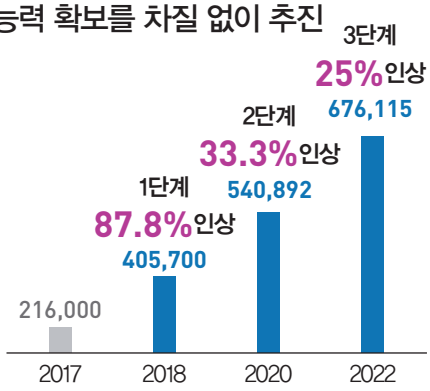
- 북핵 · WMD 위협 대응 핵심전력 적기 구축, 상비병력 감축 · 병 복무기간 단축, 군 첨단화 등 국방인력 구조개편 추진
  - * **병력감축** : ('18년 말) 60만명 → ('22년) 50만명 / **병 복무기간 단축**(육군기준) : ('18년) 21개월, ('21년) 18개월
- 방위사업 투명성 강화
  - * 방위사업 중개업 등록대상 확대,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시 신고 의무화 등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 조기전환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 주둔 및 현재의 연합사와 유사한 체제 지속 유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방위지침' 및 각종 전략문서에 한미 간 합의 ('18.10.31)
-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포괄적 핵 · 미사일 대응능력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 ('18.6~10월, 한 · 미 공동점검)

장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 '18년 병 봉급 87.8% 인상(병장기준 216,000원 → 405,700원)
- 사망 및 공무상 부상 장병에 대한 치료비 등 끝까지 지원
- 개인 휴대폰 사용, 평일 일과 이후 외출 활성화, 외박지역 제한 폐지



병 봉급 인상(병장기준, 원)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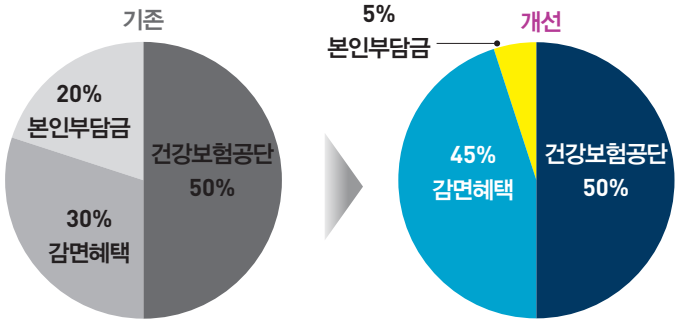
30만원
최근 5년대비 최고 수준의 참전명예수당 인상('18년)

17,989명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처음으로 생활지원금 지급

202명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했습니다.

- **생활지원금** 생활이 어려워도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제도 신설 ('18년)
  - *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후손 17,989명에게 723억원 지급
- **보상금** 최근 5년 대비 최고 수준의 보상금 인상
  - * 보훈보상금 : (역대정부 평균 인상률) 3.7% → ('18년 인상률) 5%
  - * 참전명예수당 : ('16년) 20만원 → ('17년) 22만원 → ('18년) 30만원(36% 인상)
-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보훈병원,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대폭 확대
  - * 1인당 평균 외래진료비 125,290원 기준 본인부담금 25,058원 → 6,264원(75% 감소)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18년)

독립정신 계승 및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발굴 · 포상 확대
  - * 여성 독립운동가 202명 발굴, 독립유공자 포상 355명(전년비 86명 증가)
- 3 · 1 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을 통한 독립정신 계승 및 확산 노력
  - *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18.1월) 및 '10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 확정('18.12월)

04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견실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8년 기준)

6천억 달러
사상최초 수출
(세계 6위)

세계 **7**번째
30-50클럽
(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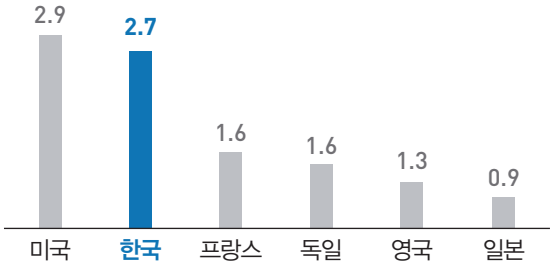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하였습니다.('18년 31,000달러 상회 추정)

- 세계 7번째로 30-50클럽 가입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
  * 30-50클럽 :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태리

경제성장률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시에도 양호한 성장세입니다.('18년,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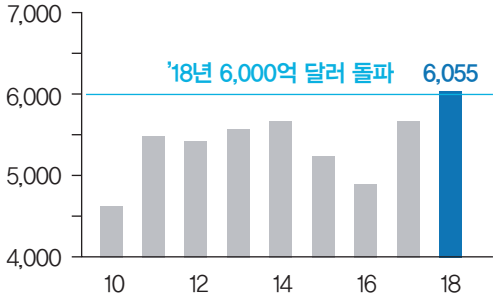
'18년 OECD 주요국 성장률(%)

* 자료 : OECD

수출

역대 최고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8년 6,052억 달러)

- 사상 최초 수출 6천억 달러 돌파(세계 6위)
  * 역대 수출액(억달러) : **1위** 6,055('18년) **2위** 5,737('17년) **3위** 5,727('14년)
- 무역규모 1.1조 달러, 세계 9위('18년, 잠정)
- 신남방 지역 수출 역대 최대 실적 경신(1,159억 달러, 잠정)
- 신북방 지역 수출 4년만에 100억 달러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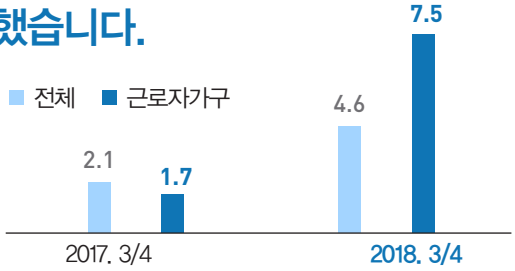


수출금액 추이(억 달러)

소득 · 소비

가계소득이 개선되며 소비도 견조한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 임금 상승폭 확대로 근로자 가구 중심으로 가계소득 개선
  * 가계소득 증감(전년비): ('17.3분기) 2.1% → ('18.3분기) 4.6%
- 견조한 소비흐름 지속
  * 소매판매(%, 전년비): ('17)1.9 →('18.1/4)5.0 →('18.2/4)4.7→('18.3/4)3.8



가계소득 증감(전년비, %)

물가상승률

'18년 물가상승률은 1.5%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습니다.

외환보유액

'18년 외환보유액은 4,037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18.12월말 현재

기타 거시지표

국가신용등급(AA) 역대 최고치, 외국인 투자유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국가 신용등급(S&P 기준) : 중국 · 일본보다 2등급 높은 수준 * 외국인 투자유치 : '18년 269억달러

더 노력하겠습니다!

- 지난 600여 일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는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뼈 아픈 부분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 다시 뛰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거시 경제지표는 양호한 만큼, 국민 · 기업과 힘을 합쳐 정부가 전력투구한다면 반드시 고용불안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습니다.
- 올 한 해, 정부는 무엇보다 시장의 근본적인 일자리창출 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주력산업 · 신산업 · 서비스산업 영역에서 산업혁신과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인재양성과 함께, 일자리 어려움이 큰 청년 · 여성 · 어르신 등에 대해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05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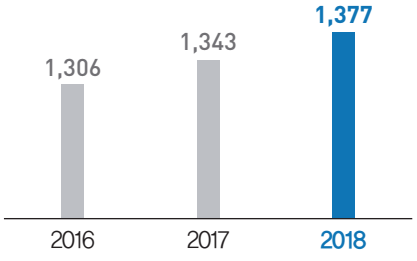
1,377만명
'18년 상용직 취업자 수

1,343만명
'18.12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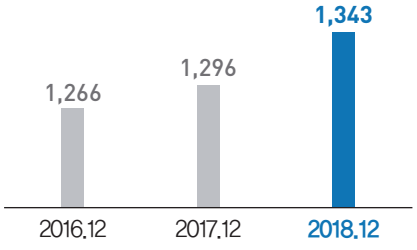
17.2만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정('18.12월)

상용직 증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 확대 등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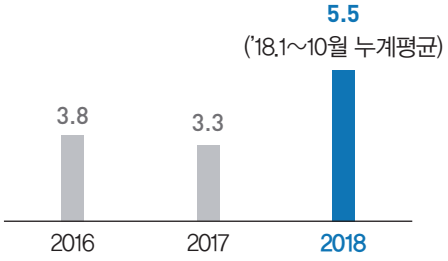
-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이상 늘리고,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대상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18.7월),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18.8월, 경사노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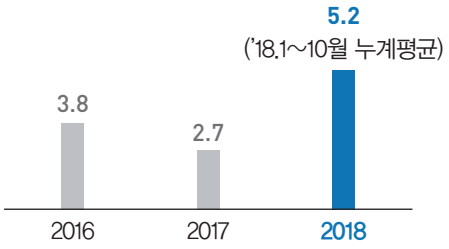
상용직 취업자 수(만명)



고용보험 가입자 수(만명)



1인이상 명목임금상승률(%)



5인이상 명목임금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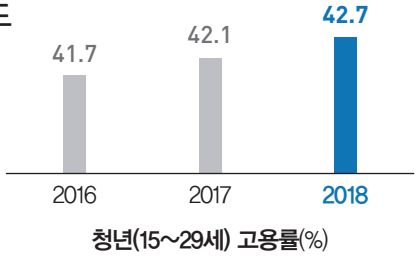
고용의 양적 성장은 다소 둔화 되었습니다.

- 생산가능인구 감소, 온라인화 · 무인화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로 연간 취업자가 9.7만명 증가에 그침
- 다만, 고용률(15~64세)은 66.6%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청년 · 여성의 고용률은 지속 상승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청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2.8만명의 청년을 정규직 추가 채용
-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 소요기간 단축 및 장기근속 유도
-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1만개 창출



청년(15~29세) 고용률(%)

여성

- 여성의 재취업 지원 확대 및 경력단절 예방 강화

  * 새일센터 이용 취업자 : ('17) 17.1만명 → ('18) 17.3만명(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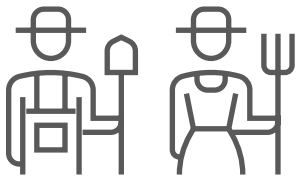
신중년

- 주된 일자리 근속기간 증가 지원 강화

  * 주된 일자리 근속기간 : ('16년) 14년 11.1개월 → ('17년) 15년 3.5개월 → ('18년) 15년 4.9개월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 지원
- 만 50세 이상을 대상, '상담–훈련–재취업' 패키지형 서비스 제공

농어업부문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있습니다.

- 청년 영농 · 영어 정착지원금(월 최대 100만원)으로 청년 창업 지원 * '18년 1,700명, '19년 3,500명
- 새로운 직업 및 일자리 창출
  - **새로운 직업** : 동물간호복지사, 양곡관리사 등('19년 제도화 → '22년 2,800명)
  - **새로운 일자리** : 도시농업 관리업, 생활승마서비스업 등('19년 390명 →'22년 2,200명)
  - **공동체기반 일자리** : 사회적농업, 지역자원 연계 일자리('19년 1,445명 → '22년 9,900명)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로 고용창출의 버팀목 역할을 했습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17.2만명 정규직 전환 결정('18.12월)
- 맞춤형 일자리 5.9만개 창출
- 현장민생 및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 일자리 충원

  * 소방 · 경찰 등 현장민생 공무원 3.6만명 충원

  * 간호 · 간병(0.3만명), 장애인 활동보조(0.6만명) 등 2.1만명 / '19년 9.4만명 추가 충원 예정

06

우리 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4+1

규제 샌드박스 4법 통과

행정규제기본법 상임위 통과('18)

1,800여 건

규제개선 방안 확정

세계에서 포괄범위가 가장 넓고 앞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도입**
  -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통해 신제품 · 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 지원
- **중소기업 규제 차등 적용**
  - 규제부담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 · 소상공인에 대해 규제를 면제 · 유예하는 제도 도입('18.10)
- **적극행정 지원**
  - 신산업분야 감사자제,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적극행정 지원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 신산업 · 신기술 분야의 규제체계를 先허용-後규제 방식으로 전면 개편, 신속한 시장출시 허용(103건)
- 신산업 · 신기술의 전개양상을 예측, 자율주행차 분야에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30건)
- 수소 · 전기차, 드론, 가상현실(VR),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현장애로 171건 해소







가치갈등 · 이해상충으로 해결이 지연된 'Big Issue'를 해결하였습니다.

- **의료기기 규제혁신** 첨단의료기기 조기 시장진입, 체외진단분야 '先진입–後신의료기술평가'
-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한도 확대(현행 4 → 34%)
- **데이터 규제혁신**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 가명정보 이용범위 확대, 데이터 결합 허용 등
- **입국장 면세점 도입** 해외여행 국민불편 해소 및 여행수지 개선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 개설('19.5월)

"공유경제 등 Big Issue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에 매진하였습니다.

- 지역발전 · 주민편의를 위한 규제혁신('17.12월) → **47건**
- 경쟁제한 규제혁파('17.12월) → **25건**
- 영업 · 입지 규제정비('18.4월) → **38건**
- 창업규제 혁신('18.10월) → **105건(86개 업종)**
- 시장진입 · 영업규제 혁신('18.10월) → **40건**

사례 외국인 대상 관광안내업 창업 지원

개인 외국인 관광객 안내시, 단체와 같이 일반여행업 등록 (자본금 최소 1억원)

→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 신설 및 요건 완화(2천만원 내외)**

*개선방안 연구용역중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 행정조사 혁신('17.12월) → **175건**
- 온라인 · 전자문서 규제혁신('18.5월) → **113건**
- 시험 · 검사기관 운영 개선('18.6월) → **157건**
-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 **367건**

사례 진료기록 온라인 발급확대

진료기록 사본 필요시 의료기관 직접 방문

→ **본인 인증 · 확인 후 온라인 사본발급 허용**

*의료법 시행규칙('18.9)

규제개혁신문고

국민의 규제애로,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7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혁신성장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5G
'18년 12월, 세계최초 상용화

3.4조원
'18년 벤처투자 역대 최고치

20.5조원
'19년 정부 R&D 예산 최초 20조원 돌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반(Network-Data-AI)을 구축하였습니다.

- **네트워크** 모바일라우터 기반 5G 서비스 상용화('18.12월), '19. 3월 세계최초 5G 스마트폰 서비스 개시
- **데이터** 국내 데이터 시장 15조원 돌파(전년대비 5.6%↑), 2023년까지 30조원 규모로 성장 추진
- **인공지능** AI 전문기업수 증가('16년 27개 → '18년 43개), AI 유니콘기업 10개 육성(~23년)

  * 미국과의 기술격차 : '16년 2.4년 → '18년 1.8년(ICT 기술수준 조사보고서)

미래혁신산업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 **수소경제** 세계적인 수소기술을 활용, 2030년 수소차 · 연료전지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목표
  * 세계 최초 수소차 양산 성공, 핵심부품 99% 국산화, 수소차 세계시장 점유율 50%
  * 수소차 보급(대) 177('17) → 889('18) → 4,000('19) / 수소충전소 구축 '18년 15기 → '22년 310기
- **스마트공장** '19년 4천개를 포함해 '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
- **스마트산단** '19년 2개 → '22년 10개 조성
- **스마트팜혁신밸리** '19년 2개 → '22년 4개 조성
- **스마트양식클러스터** '22년 2개 조성
- **친환경에너지** '18년 2.99GW 재생에너지 보급
- **바이오**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본격 추진
  * 바이오헬스 수출 71억 달러(전년대비 30.9%↑, '18.상)
- **우주** 독자기술 '누리호' 시험발사체, 차세대소형위성 1호 등 발사 성공, 우주 주권국으로 한단계 전진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기업 창업 생태계를 조성 하였습니다.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혁신모험펀드 10조원(~'22년),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65개소), '지역 혁신창업 허브' 등 → **'18년 신설법인 수 역대 최고인 10만개 돌파**

  * 신설법인 수 : ('16) 96,155 → ('17) 98,330 → ('18) 100,000 이상(예상치)

- **민간중심 벤처 혁신** 벤처확인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전문가로 변경, 진입장벽 완화 등

  → **벤처투자 역대 최고치(3.4조원), 벤처투자 회수 역대 최고치(2.7조원)**

- **연대보증 폐지** 업력에 관계없이 정책 금융기관의 연대보증 폐지('18.4월)

  * (기존)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17.8~) → (개선) 업력 관계없이 폐지

- **성장지원펀드 조성(8조원)** 중소벤처 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히고 있습니다.

- **반도체 · 디스플레이** 적기에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선점을 지원, 추월 불가능한 초격차전략 추진

  * 10년간 120조원(민간투자)을 투자, 대 · 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 Post-OLED,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선도 기술개발에 2조원 투자

- **자동차** 자동차 부품산업 생산성 활력제고 및 미래차 전환 지원

  * 노후차 교체 지원, 친환경차 생산비중 대폭 확대(현 1.5% → '22년 10%)

- **조선 · 해운** 친환경 선박시장 창출, 자율운항 · 수소선박 개발 등 미래경쟁력 확보

  * '18년 수주량 1,263만CGT로 전년 대비 67% 증가(잠정), '11년 이후 7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

  * 자율운항선박, LNG추진선 개발 및 스마트 K-야드 조성(총 1.5조원)

  * 한국해양진흥공사('18.7) 등을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선(20척) 등 총 57척 발주

- **섬유 · 가전**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 전통산업을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

  * 동대문을 중심으로 주문~생산이 24시간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 구축

  * 중소 · 중견 가전업체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신제품 실증 지원

08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90% 이상 해소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해소 ('18년)

107 조원
연간 상생결제액('18년), 최초 100조원 돌파

7,155 억원
상생협력형 펀드 조성

하도급 · 가맹 · 유통 · 대리점 분야의 甲乙관계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하도급
- 하도급업체에 대한 전속거래 강요 · 원가정보 요구 금지
- 부당감액, 기술유용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가맹
- 가맹점주에 대한 보복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
- 점주의 영업지역을 본부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금지

유통
-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 도입
- 대형쇼핑몰 · 아울렛을 유통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입점업체 보호 강화

대리점
- 반복적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치 상향조정
- 구입강제,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행위의 구체적 유형 고시

✓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상승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남**

- 하도급 — 공정위 조치에 따라 '18년 2,103억원 하도급 대금 지급
- 가맹 — 영업지역 침해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 감소(27.5% → 15.5.%)
- 유통 — 판매장려금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 증가(74.1% → 80.9%)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했습니다.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를 90% 이상 해소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 : '16년 94개 → '18년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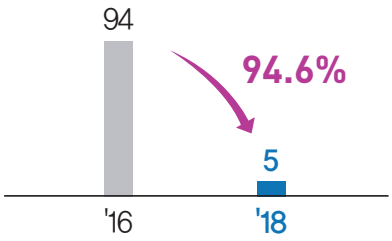
-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엄중 제재

  * '18년 과징금 401억원 부과, 법인 6개, 개인 12명 고발

- 정보공개, 재계와의 소통 등을 통해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유도

  * 롯데, 대림 등 15개 기업집단이 소유 · 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안 추진

- 주주권행사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선언('18.7월)



대기업 순환출자 현황(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유도

  ① 사내벤처 육성 대기업 참여 확산

  * 12개 대기업 신규도입, '17년 대비 60% ↑

  ② 대기업의 스타트업 육성 확산

  ③ 상생협력형 펀드 조성 · 운영(7,155억원, '18.12월)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18년 연간 상생결제액 최초로 100조원 돌파('18년, 107조원)



부정청탁과 적폐 등 일상 생활속 낡은 관행들이 근절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교육 · 홍보 등 지속 추진

> ✓ **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결과('18.9월)**
>
> ▷ 국민 중 75.3%가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
> ▷ 국만 중 87.5%가 청탁금지법이 우리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

- 국민들에게 상실감 · 좌절감을 야기하는 생활 속 불공적 관행과 부조리(생활적폐) 해결

  *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중심 △보조금 부정 수급 △사무장병원 △세무조사 등 생활적폐 지속적 발굴 · 추진

0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했습니다

100%
누리과정 국고지원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501학급
574개소
국공립유치원 신설('18년)
국공립어린이집 신설('18년)

유아

누리과정 전액 국가가 지원합니다.

-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국고분 : ('17년) 8,600억원(41.2%) → ('18년) 2조 587억원(100%)

가정에서의 양육도 지원합니다.

- 74만 6천명의 만0~6세 아동(전체 25.7%)에 가정양육수당 지급('18.12월 기준)

  * 만 0세 : 20만원, 만 1세 : 15만원, 만 2~6세 : 1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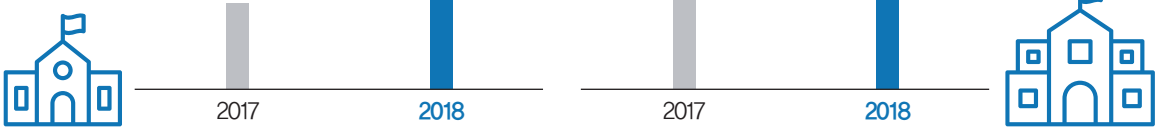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18년 9월부터 소득 하위 90% 만6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원 지급
- '19년 1월 소득 요건 폐지, '19년 9월 만7세 미만으로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 유치원 확충,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 '17년 373개소, '18년 574개소 신설
- 국공립유치원 '17년 585학급, '18년 501학급 신설

OECD 국공립 유치원 · 어린이집 취원율(66.9%) 감안, 지속 확충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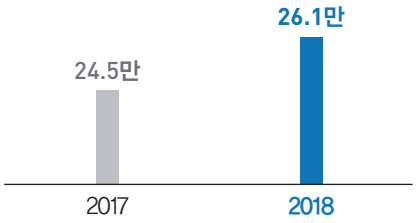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비율(%)　　국공립 유치원 취학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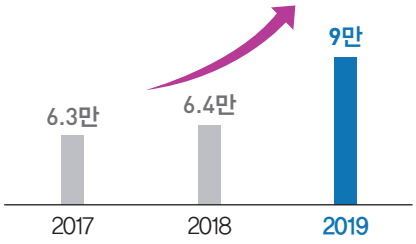
유아 · 초등

온종일 돌봄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돌봄서비스 확대
  - ＊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수 : ('17년) 24.5만명 → ('18년) 26.1만명
- 다함께돌봄센터 확대('19년 150개 → '22년까지 총 1,800개 신설)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 및 대상 확대
  - ＊('18년) 연 600시간(중위소득 120% 이하) → ('19년) 연 720시간(150% 이하)
  - ＊ 수혜 가구 ('17년) 6.3만 가구 → ('18년) 6.4만 가구 → ('19년) 9만 가구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수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가구

초 · 중 · 고

취약계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대폭 인상
  - ＊ 초등학생 : ('17년) 41,200원 → ('18년) 116,000원 중 · 고등학생 : ('17년) 95,300원 → ('18년) 162,000원
- '18년 특수교사 1,173명 증원
  - ＊ 특수교사 확보율 : '17년 67.2% →'18년 71.9%

고졸취업자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고졸 재직자가 대학진학시 등록금 전액 지원
  -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중소기업 3년 이상 고졸재직자 : 약 9,000명('18년)
-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 초기 자산형성 지원
  - ＊1인당 장려금 3백만원 : ('18년) 2만4천명 → ('19년) 2만5천 5백명

대학

학생 ·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18년부터 국 · 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 반값등록금 지원대상 확대
  - ＊ 사립대 평균등록금 절반(368만원) 이상 지원 : ('17년) 약 57만명(중위소득 90% 이하) → ('18년) 약 69만명(120% 이하)

10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20 → 25만원
기초 · 장애인연금 인상
('18.9월)

1단계 생계 · 의료급여 **3.4만 가구**
2단계 주거 급여 **14 만 가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수혜가구('18.12월 잠정)

1.8조원
가계통신비 경감
('18년)

노인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인상했습니다.

- 기초연금을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18.9월)
- '19.4월부터 노인 소득하위 20% 어르신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

장애인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을 인상했습니다.

-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 (26만명 혜택, '18.9월)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16만명)의 급여액을 '19.4월부터 30만원으로 조기인상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마련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22년 17천명),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22년 8개소)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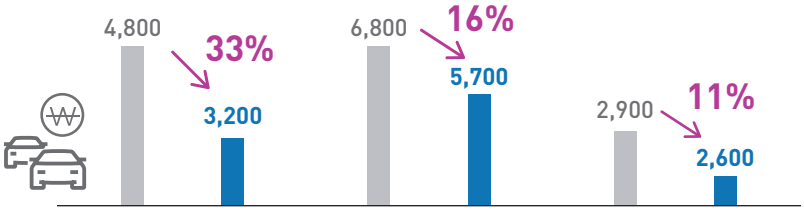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기초수급자 증가
  - 1단계('17.11월)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
  - 2단계('18.10월) :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3단계('19.1월) :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는 소득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경우도 제외

교통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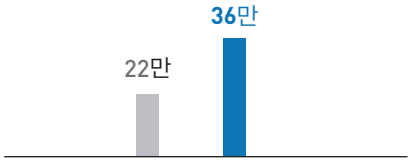
- 3개 주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 서울외곽(4,800 → 3,200원, 33%↓), 서울춘천(6,800 → 5,700원, 16%↓), 수원광명(2,900 → 2,600원, 11%↓)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공사 착수('18.12월), 개통시 수도권 통근시간을 최대 80% 단축
- 전국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공공형 택시(100원 택시)를 도입, 주민 이동권 보장
-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17년 27개 → '18년 36개), 도서민 일일생활권 보장



3개 주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원)



100원 택시 수혜인원(명)

핵심 생계비 중 하나인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등 연간 약 1.8조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경감
- EBS 교육사이트 무제한 사용서비스 출시, 교육급여 수급 고교생 12만명 우선지원('19년~)

사실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르면 기초연금 수급이 탈락되나요?

-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되고 있습니다.
- 주택 · 토지의 공시가격이 변동하면 선정기준액도 당해년도 노인인구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됩니다.

  ➜ 따라서, 공시가격이 변동되어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분이시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계속 포함되게 됩니다.

11

국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1.3 조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경감

15 → 8 만원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2인실) 비용 절감

256 개소
치매안심센터 설치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 상복부초음파('18.4월), 뇌 · 뇌혈관 MRI('18.10월) 등 건강보험 적용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2 · 3인실 건강보험 적용 ('18.7월)
- 선택진료비를 폐지하여 비용부담 해소('18.1월)

대상별 특성에 맞춘 건강보험 혜택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 노인 :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 → 30%)
- 어린이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10~20% → 5%)
  18세 이하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30~60% → 10%)
- 여성 : 난임 치료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혜택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환자와 가족의 간병부담을 덜어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합니다.

-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담 간호인력이 환자의 회복을 돕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

치매국가책임제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낮추고, 서비스는 확대하겠습니다.

- 중증치매 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17.10월)
- 신경인지검사('17.10월), MRI검사('18.1월) 건강보험 적용
-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상담 · 검진 · 1:1 사례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인지지원등급' 신설('18.1월)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 요양시설을 5년간('18~'22년) 단계적 확충

재난적 의료비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18.7월)
- 입원의료비 및 고액 외래의료비(항암 · 희귀난치질환 등)를 소득에 따라 비급여 등 본인부담액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18.7월)

국민 의료비, 얼마나 줄어드나요?

1.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 만성 신장병, 빈혈,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2세 남아, 신이식술 시행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21일 입원한 경우
  - → 당초 본인부담 총 의료비 4,395만원 중 1,243만원 부담 환자,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으로 397만원만 부담 (약 68%부담 감소)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 폐암진료로 약 3달간 총 3,986만원 본인부담 의료비가 발생한 66세 환자*의 경우

  * 단, 소득판정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등 요건 충족 시 지원

  -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통해 1,877만원을 지원받아 약 47%의 의료비 경감

3.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완화 (50→30%)

- 사고 ·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해 치아상실한 65세 어르신이 치과병원에 방문하여 임플란트 1개 시술을 받은 경우
  - → 당초 총진료비 약 124만원 중 62만원 부담 환자, 임플란트 본인부담 인하로 37만원 부담 (약 40% 부담 감소)

12

투기는 차단하고,
실수요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은 강화했습니다

98%
서울 일반공급
무주택 실수요자 당첨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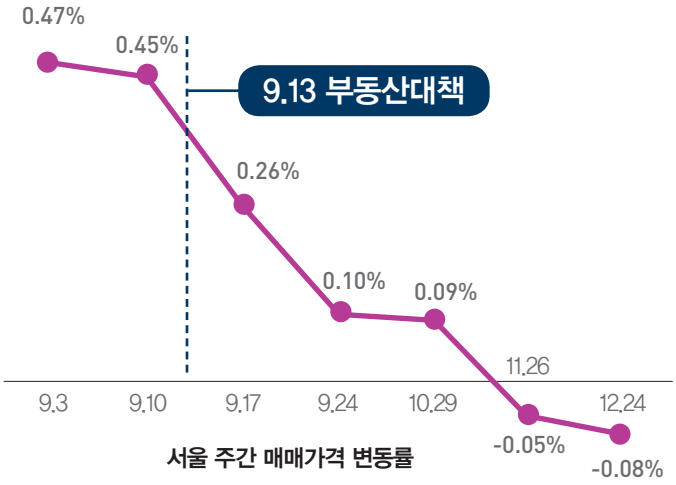
(2017) 12.7
(2018) **14.8** 만호
공공임대주택공급
(전국, '18년)

-0.18%
'18년 전국 전세가격
하락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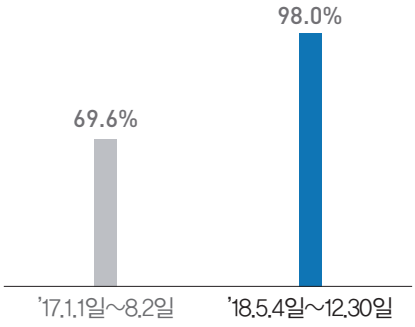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투기수요 억제 및 공급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 청약가점제 확대, 무주택자 우선 추첨, 1순위요건 강화 등 실수요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및 관리 강화
- 다주택자 등에 대한 종부세 · 양도세 강화 및 주택구입 대출 규제 강화 등 투기수요 억제
-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30만호 규모), 도심 내 규제개선(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한 도심 내 공급확대 추진



서울 주간 매매가격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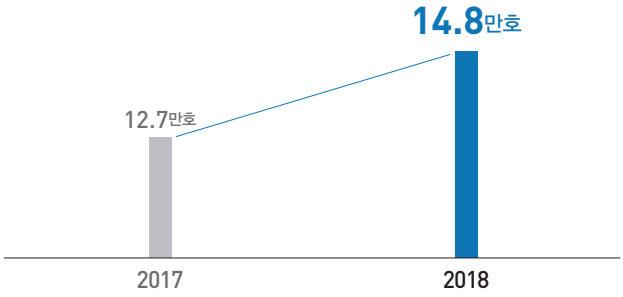


서울 일반공급 무주택자 당첨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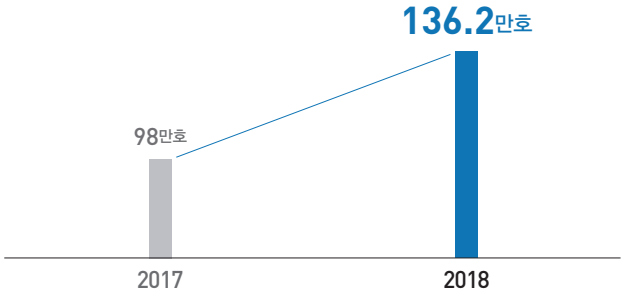
서민 주거 안정

공공임대 공급 확대 및 등록민간임대주택 확충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였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초과 달성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공급
- 임대료 인상 제한, 의무 임대기간 등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 민간임대주택 35% 증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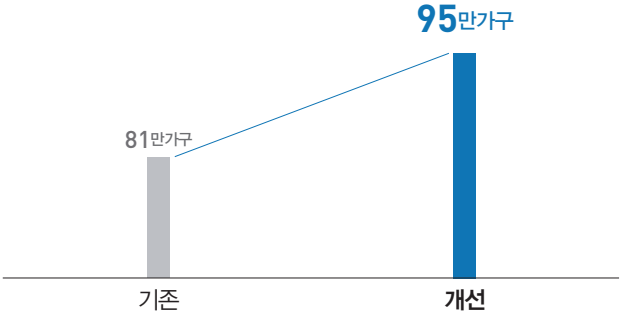


등록민간임대주택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청년 ·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 신혼 특별공급 2배 확대,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 어르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등 어르신 주거 지원 강화
- 저소득층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 수급자

13

'과로가 있는 삶'을 탈피하고 우리사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16) 2,052 → (2018) **1,978시간**

연간 노동시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18.10월까지 실적기준 예상치)

(2018) 7,530 → (2019) **8,350원**

최저임금 인상

(2016) 101.5 → (2018. 3/4) **105.8**

노동생산성 지수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 1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근로기준법 개정, '18.3월)
  - * 300인 이상 사업장('18.7월~), 연장근로를 제한없이 실시할 수 있는 특례업종 축소(26개 → 5개)
-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대해 재정지원 및 생산성 향상 지원('18.5월)
-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노동시간 지속 감소
  - * 임금근로자 연간 노동시간(시간) : ('16년) 2,052 → ('17년) 2,014 → ('18년) 1,978
    ('18.10월까지 실적 기준 예상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출산 · 육아 · 돌봄 지원 확대를 통해 일 · 가정 양립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 출산휴가 급여 인상
  - *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 ('17년) 150 → ('18년) 160 → ('19년) 18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남성 육아휴직 지원 강화
  - * 남성 육아휴직자(명) : ('16년) 7,616 → ('17년) 12,043 → ('18년) 17,662
- 영세 ·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공공직장어린이집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 * 직장 어린이집 설치 사업장(개) : ('16년) 948 → ('17년) 1,053 → ('18년) 1,111

최저임금 현장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18년 7,530원 → '19년 8,350원)
-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10인 미만, 도소매 · 숙박음식점업 중심)
  * 지원실적('18년) : 총 66만개 사업장, 264만명의 노동자에 대해 2조 5,136억원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사회안전망 확충
-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포함(최저임금법 개정, '18.6월)
- 최저시급 환산시, 주휴수당 및 주휴시간 포함 명확화(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18.12월)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도서 · 공연비 소득공제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도서구입비 · 공연관람비의 30% 공제(추가 100만원 한도)
-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도입
  * '18년 2만명 / 근로자 적립시 기업 · 정부 지원
-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등 전국 문화기반시설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저소득층 문화향유 확대
  * 통합문화이용권 '17년 152만명→'18년 159만명/ 스포츠강좌 이용권 '17년 40,826명→'18년 43,750명
  * '16년 2,595개 → '17년 2,657개 → '18년 2,749개

사실은 이렇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의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신설되나요?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정(1953년)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수당으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 금년 최저임금(시급 8,350원)을 고시('18.8월)할 때에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 1,745,150원을 명시하였습니다.

➜ 시행령 개정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법정 주휴시간이 포함되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1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16년 대비)

94%↓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건수 감소

30여년
30여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위험의 외주화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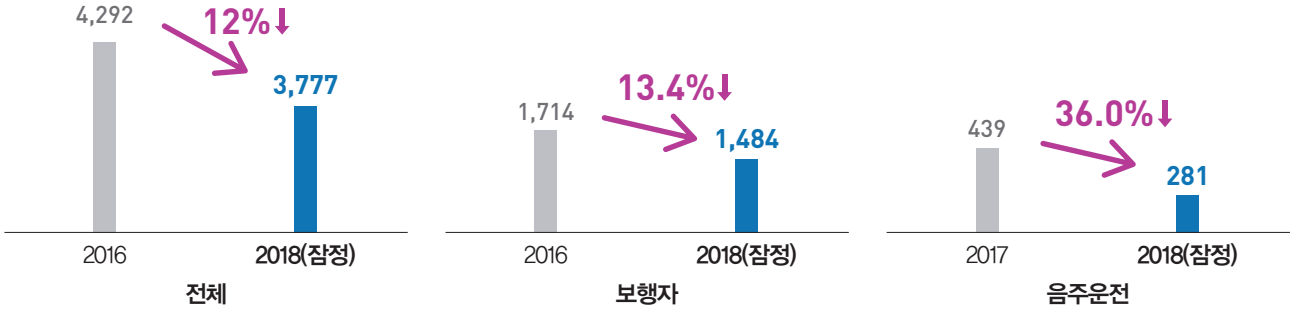
국민생명지키기 3대프로젝트 (교통사고 · 산재 · 자살)

❶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 보행자 중심 체계 전환, 음주운전 처벌 · 기준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등 예방 · 관리 강화

  * 음주운전 처벌('18.12) : 사망사고 발생시, 1년 이상 → 3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

    음주운전 기준('19.6) : 면허정지 0.05% → 0.03% 이상 / 면허취소 0.10% → 0.08%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단위 : 명)

❷ 산재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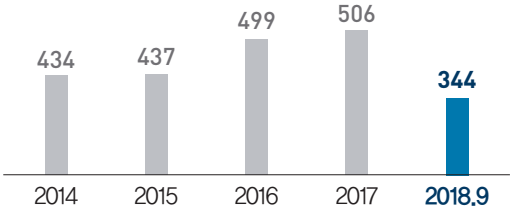
- 30여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 현행 도급인가 대상인 유해 · 위험 작업의 사내도급 원칙적 금지,
    원청의 책임 범위를 사업장내 모든 작업으로 확대

- 건설현장 휴일공사 제한, 발주기관 책임강화

  * 건설현장 사망자 수, 4년 만에 첫 감소 전망

    2018년 타워크레인 사고사망자 0명



건설현장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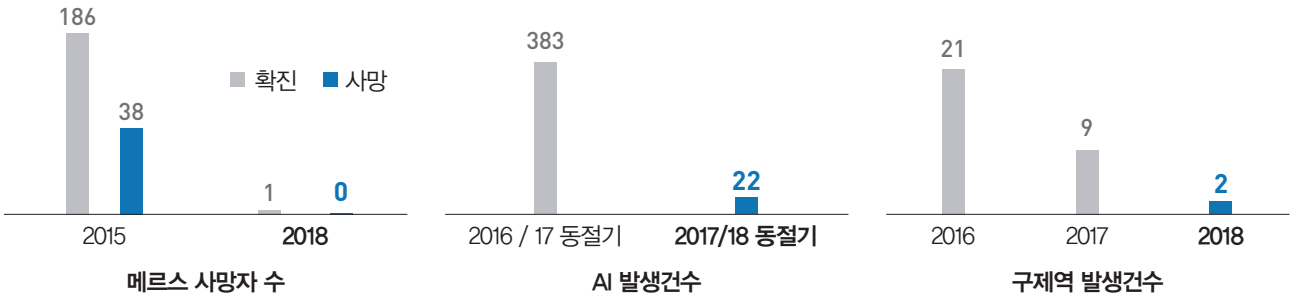
❸ 자살 자살자 수 감소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과학적 분석에 근거, 지역사회와 함께 자살예방 집중 추진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한 자살예방 전문 상담전화(☎ 1393) 개통
-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의 유통 금지,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메르스(MERS)와 조류인플루엔자(AI)를 철저히 막아내고 있습니다.

- 메르스 환자 1명 유입되었으나 초기 격리 및 긴급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확산없이 종료
- 조류인플루엔자 농가의 조기신고, 선제적 이동중지 명령, 반경 3km 살처분 원칙 적용 등 신속한 초동 조치

* AI · 구제역 특별방역기간('18.10월~'19.2월) 운영중, '18/19년 동절기 현재까지 AI 미발생



재난관리체계를 내실화 하였습니다.

안전점검 내실화

- 안전점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점검 실명제 및 점검결과 공개 등 국가안전대진단 개선
- 약 600만개 시설물의 안전정보 DB 구축 및 대국민 공개 기반 조성

피해복구 지원개선

- 특별재난지역 선포 범위를 읍 · 면 · 동 단위로 확대, 국고 추가지원(160억원)
- 주택 피해자 재난지원금 44% 상향(전파 900 → 1,300만원, 반파 450 → 650만원)

정보전달 체계개선

- 지진 · 지진해일 긴급재난문자 발송 단계를 축소(기상청 · 행안부 → 기상청 직접 발송)
- 총 14,365기 전광판을 활용한 민방위 경보 전파체계 마련('18.12.)

15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7만대
미세먼지 저감위한 친환경차 보급 ('18년 누적)

1.5만여대
통학버스 안전장치 설치 ('18년 기준)

365일 **24**시간
해외안전지킴센터 운영

전방위적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 '18년 미세먼지(PM2.5) 농도 : 25 → 23㎍/㎥으로 2㎍/㎥ 개선(△8.0%)

- 경유차 배출 저감 경유차를 줄이고 배출기준 강화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
  *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현실화(770 → 3,000만원),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저공해 경유차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
- 친환경차 확대 LPG차,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 친환경차 47만대('18년까지 누적, 전기차 5.7만대, 수소차 889대, 하이브리드차 41만대)
    → '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7만대 보급(수소버스 2,000대 포함))
  * 충전 인프라 확충(민 · 관 합동으로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기 설치, 수소충전소 310개소 구축)
- 친환경선박 확대 LNG추진선 보급, 친환경선박 대체 지원(선박가의 10%지원)
- 발전 LNG등 친환경발전 가격경쟁력 제고 / 봄철(3~6월) 석탄 발전소 상한제약 확대 등
- 국제협력 중국 등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사실은 이렇습니다!

에너지전환 때문에 석탄발전이 늘어 미세먼지가 더 많이 발생하나요?

- 에너지전환의 목표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장기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는 대폭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 석탄발전소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노후한 석탄발전소 폐지 및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 석탄발전소(발전5사)의 초미세먼지 발생량(만톤) : ('16년) 3.07 → ('17년) 2.67 → ('18년, 잠정) 2.19

- 앞으로도 노후 석탄발전소의 봄철 가동중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화력발전 제한, 봄철 친환경연료 사용 확대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더욱 줄여나가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사이버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 공공 · 민간 · 교육 · 문화예술 등 분야별 성희롱 · 성폭력 '신고센터' 설치('18.3월)
- 가해자 처벌의 법정형과 징계수위 상향('18.10월)

디지털 성범죄

- 해외 음란물, 성매매 사이트 차단(64,678건, '18년 기준)
- 웹하드상 불법음란물 및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154,215건('18년) 삭제
-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18.4월), 상담 · 삭제 등 종합 지원

가정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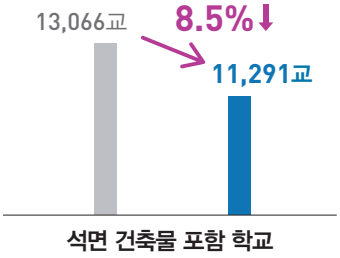
- 가해자 격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 및 신변보호 강화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활성화

스토킹 데이트 폭력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
- 스토킹 · 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일시보호 등 맞춤형 지원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 '27년까지 '무석면학교' 실현 추진
- 유 · 초 · 특수학교 통학버스 1만 5천여 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되도록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국내생산 가공식품 중 약 85%가 HACCP에 따라 안전하게 생산 · 유통

  * HACCP 적용식품 생산율 : ('16) 68.7% → ('17) 83.9% → ('18) 85.2%

-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적극 차단 * ('17) 평균 88일 소요, 75%차단 → ('18) 21일, 84%

「해외안전 지킴센터」, 24시간 365일 재외국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 가나 해상 피랍 어선 선원 3명 전원 무사 석방('18.4월)
- 일본 홋카이도 지진 발생시 국민 약 6,000명의 신속한 귀국 지원('18.9월)
- 태풍 위투 사이판 강타시 군 수송기 파견, 고립된 국민 799명 괌 이송('18.10월)
- 리비아 피랍 우리 국민의 조속한 무사 석방을 위한 노력 경주



16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167곳
도시재생뉴딜 사업대상지
('17년 + '18년)

8.6조원
생활 SOC 사업 예산
('19년 기준)

14지역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18년)

지역과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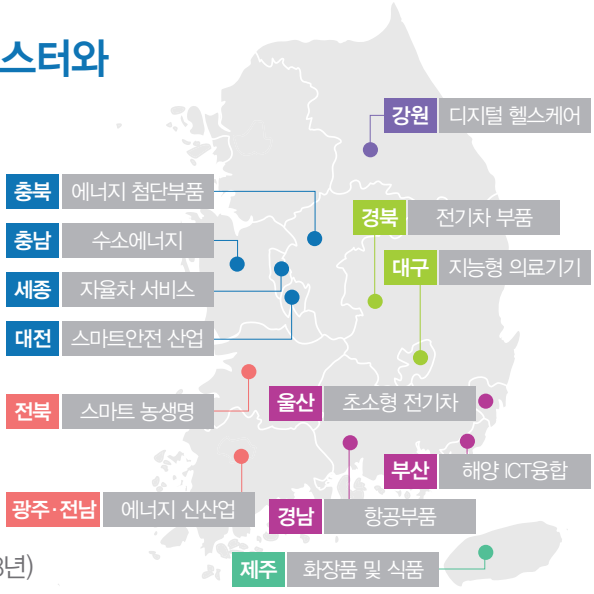
- **공공투자 프로젝트** '19년 1분기 중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 패스트트랙(사업 착수비용 지원 등) 통한 조기 사업 착수
-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8.6조원)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국고보조율 상향 등을 통한 조기 추진

  * 공급자 중심(인구수 기반)에서 수요자 중심(접근시간 기반)으로 정비, (예시) 1곳 / 3만원 → 도보 10~15분

지역 제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 **국가혁신클러스터** 혁신도시, 산단 등 기존 거점 활용, 14개 지정 규제혁신,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지역산업 위기대응**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조선업황 회복지연 등에 대응하여 지역 지원대책 수립
- **예산지원** 자동차, 조선 등 위기지역 지원

  * 9,300억원 규모 추경, 1,730억원 규모 목적예비비 편성 · 집행('18년)



국가혁신클러스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바꾸겠습니다.

- 지역주도 사업을 통해 구도심을 혁신거점 공간으로 조성, 노후 주거지에는 기초적 생활인프라 확충
- '17년 전 시범사업(68곳) 활성화계획 수립 완료, '18년 대상지 대폭 확대

＊ 뉴딜 사업대상지 : '17년 68곳, '18년 99곳 선정('15/'16년, 33곳)



'18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 지역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촌
- 역대 최초 햅쌀 가격 형성 전 선제적 시장격리
- '10년 이후 최대 시장격리 물량(37만톤) 등 총 72만톤 정부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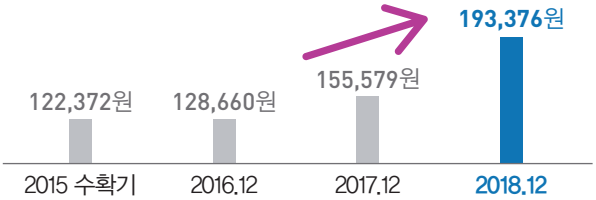
＊ 20년전 수준까지 떨어졌던 쌀 산지가격 회복('15년 수확기 122,372, '16년 128,160 → '18년 193,376원)

어촌
- 어촌뉴딜300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주여건 개선 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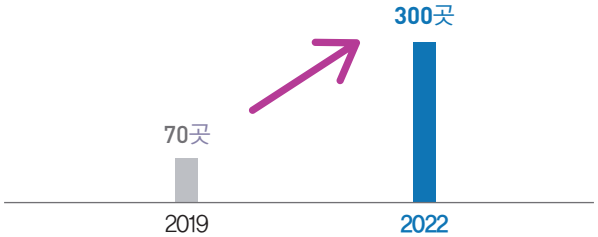
– '19년 70개소 → '20년 70개소 이상 → '22년까지 300개소

항만
- 상부시설 준공, 규제개선 등 통해 항만지역 민간투자 지속 확대

– 항만인프라 민간투자 유치: '16년 1.1조원 → '17년 1.3조원 → '18년 1.6조원



쌀값 추이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16년) 1,087억원 → ('18년) 3,714억원 → ('19년) 약 2조원(계획)

17

지방분권,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3.3 조원
국세 지방이양

571 개
국가사무 지방이양 추진

30 년
획기적 지방분권을 위해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추진

자치분권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통해 분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주민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
  - △ **'주민주권' 구현** : 주민자치의 원리 명시, 정책결정 · 집행과정의 주민참여권 명시 등
  - △ **자율성 확대** : 국가–지방 사무배분 기준 마련,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등
  - △ **책임성 확보** : 지방의회 의정활동 종합공개, 시 · 군 · 구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국가의 시정 · 이행명령 등
-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추진 (「주민조례발안법」, 「주민투표법」 등 제 · 개정안 마련)
  - △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 제출, 청구연령 하향(19 → 18세) 등
  - △ **주민투표제 · 주민소환제 활성화** :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등
  -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 주민제안사업 신청 획기적 증가('16년 4.3조원 → '18년 8.5조원)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중앙정부 기능을 과감히 이양하겠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생활 편의 · 안전 등과 관련된 571개 국가사무 일괄이양
  -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 국회 제출
  - – 장기 미이양 사무 신속이양을 위한 66개 법률 일괄개정 추진

재정분권

추가적 조세부담 없이, 지방재정을 3.3조원 확충하였습니다.

- 국세 3.3조원 지방이양 완료('19년, 「지방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개정)
  -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없이, 지방소비세율 4%p. 인상(부가가치세액의 11% → 15%)



지역의 자율성 ·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 1단계 재정분권('19~'20년)
  -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10%p.)으로 8.4조원 이양
  - 소방안전교부세율 단계적 인상(25%p.)으로 소방직 국가직화 등을 위한 재원 마련
- 2단계 재정분권('21~'22년)
  -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혁신 추진
  - 지방세 추가 확충, 중앙정부 기능의 추가 이양 등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159억 달러
신남방 지역 수출
역대 최대 실적

3.2조원
'19년 ODA 예산규모

5위
기업환경평가 결과
(세계은행)
G20 국가 중 1위

주변 4국과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미국
-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기반 마련
- 한미 FTA 개정, 철강관세조치 면제 및 대이란 제재 예외 확보 등 국민경제 밀접 현안을 원만히 해결

중국
- 정상 · 고위급간 소통 통한 양국관계 신뢰 회복
- 경제협의체 재가동, 미세먼지 공동대응 등 국민체감형 실질협력 분야 진전

일본
- 셔틀외교 복원 · 고위급 소통 활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기반 마련
- 진실과 원칙에 입각한 과거사 대응

러시아
- 19년만의 러시아 국빈방문 등을 통해 양국 정상간 우호, 신뢰 강화
- 정상간 합의에 기반, 한-러 서비스 · 투자 FTA 추진, 남북러 3각협력 한-러 공동연구 개시

외교다변화의 길, 남북으로 지평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신북방정책
- 한-러 지방협력포럼 출범(11월, 포항)으로 러 극동과 포괄적 협력의 장 마련
- 중앙아 국가들과 대규모 에너지 · 인프라 프로젝트 성공적으로 추진중
- 2018년 한-러 교역 31%(248.2억 달러), 한-중앙아 교역 49.1%(29.7억 달러) 증가

신남방정책
- 3P 분야(사람, 상생번영, 평화)에서 아세안 및 인도 등과의 협력 강화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국 개최 합의
- 신남방 지역 수출 역대 최대 실적 경신(1,159억 달러)

문화 콘텐츠(한류)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한류문화의 해외진출 확대
  - ＊ 문화콘텐츠 수출액 : '17년 68.9억달러 → '18년 75억달러
    해외 한류 동호인 수 : '17년 73백만명 → '18년 89백만명
  - ＊ K-Pop : BTS 빌보드 차트 1위(앨범 부문)



- 게임 : 배틀그라운드 100개국 1위, 1일 1억명 접속
- 캐릭터 : 핑크퐁, 유튜브 100억뷰
- K-Beauty : 세계시장 점유율 9위 및 수출 5위
  - ＊ ('17년) 세계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 4개 포함
- 해외 28개국, 1495개 정규 초 · 중등학교에 한국어반 개설
  - ＊ ('16년) 1,309개 → ('18년) 1,495개

국민들의 출입국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기준 완화('18.4월 변경 이후 16,788건 변경)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서비스 제공('18.10월)
- 전국민 출입국자 절반이 자동출입국심사 사용('16년 36% → '18년 50.8%)

상생의 개발협력을 통해 국제협력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19년 ODA 예산 규모 3.2조원으로 확대('18년 3조482억원, 1,521억원 증가)
- ODA 규모 확대(1,312개 → 1,404개), '개발협력전략회의' 신설 등 통해 체계적 지원
- 해외봉사단 등 청년 해외진출 기회 제공(5,315명) 및 민간 참여 확대(84개 → 111개)

세계가 본 대한민국

-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 결과 190개국 중 5위('18년)
  - ＊ G20 국가중 1위, OECD 국가중 3위로 선진국 상위권 수준을 유지
-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 140개국 중 '18년 15위 ('17년 17위)
- 언론자유지수 : '16년 70위 → '18년 43위(국경없는 기자회)
- OECD 정부 신뢰도(34개국) : '17년 32위 → '18년 25위
- 씨름,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18.11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대상	분류	지원정책
영.유아	육아부담 경감	• 아동수당 10만원 지원 확대 ('18.9) 소득하위 90%, 만6세 미만 → ('19.1) 만6세 미만 모든 아이 → (19.9) 만7세 미만 •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 소득무관, 유아교육비 ·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만6세 이하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양육비 지원(74.6만명, '18.12)
	육아지원	• 국공립 유치원 · 어린이집 확충 (유치원) 501학급('18) → 1,080학급 신설('19) (어린이집) 574개소('18) → 550개소 신설('19)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양육부담 완화 * 지원 시간 : ('17) 연 480시간 → ('18) 연 600시간 → ('19) 연 720시간 대상 확대 : ('18) 중위소득 120% 이하 → ('19) 중위소득 150% 이하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 아파트, 주민센터 등 활용, 지역중심 돌봄 공동체 활성화 * ('17) 160개소 → ('18) 205개소 → ('19) 276개소 * 이용인원 ('17) 66.5만명 → ('18) 95.1만명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인상 –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번갈아 사용 시, 두 번째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 * ('18) 상한200만원/월 → ('19) 상한250만원/월 • 한부모 자녀 아동양육비 확대 ('17) 13세미만, 연 144만원(7.5만명) → ('18) 14세미만, 연 156만원(8.3만명) → ('19) 만 18세 미만, 연 240만원(11.3만명)
아동	학교안전	• 통학버스 안전 강화 – 모든 유 · 초 · 특수학교 통학버스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등 설치(1만5천여대, '18) – 승하차 문자전송, 위치알림서비스 ('18, 500대 → '19, 700대) • 학교 미세먼지 관리 – 모든 유치원 · 초 · 중 · 고 · 특수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74,860실 추가 설치, '19.2) – 미세먼지 '나쁨'이상시, 질병결석 인정('18.4) • 학교시설 석면 제거 – '27년까지 무석면 학교 추진 ('17.6~'18.2, 전국 1,775교(8.5%) 석면제거) • 학교 내진보강 – 지진위험지역 7년내 보강 완료(연간 1,000억원) 그 외 지역, '25년부터 12년내 내진보강 추진(연간 1,000억원)

대상	분류	지원정책
아동	초등돌봄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초등 돌봄교실) 초등 1~2학년 중심 돌봄 확대 * '17년 24.5만명 → '18년 26.1만명 → '19년 28만(예상) – (다함께 돌봄센터) 초등 방과후 예체능 등 맞춤형 돌봄 확대 * 현 23개소 → '19년 150개소 신설 → ~'22년 1800개소
청소년	교육지원	• 교육급여 지원 대폭 확대 –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 학생 부교재 · 학용품비 지원 (초) ('17) 41.2천원 → ('18) 116천원 → ('19) 203천원, (중고) ('17) 95.3천원 → ('18) 162천원 → ('19) 290천원 • 고졸취업자 지원 확대 – 고졸 재직자 대학진학시 등록금 전액 지원('18년, 9천여명) –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 자산형성 지원(1인당 3백만원) • 특수교사 1,173명 증원 (확보율 '17년 67.2% → '18년 71.9%)
	청소년 안전망 강화	• 위기청소년 보호 · 지원 강화(('17) 약 256만건 → ('18) 약 298만건 지원) – 청소년 쉼터 ('17) 123개소 → ('18) 130개소 → ('19) 138개소 – 청소년 동반자 ('17) 1,146명 → ('18) 1,261명 → ('19) 1,316명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17) 약 1.2만명 → ('18) 약 1.8만명 – 학습멘토링, 검정고시 등 학업취득 지원센터 확대 * ('17)202개소 → ('18) 206개소 → ('19) 213개소 – 건강검진 지원 및 지원사항 확대 * 건강검진 ('17) 5,019명 → ('18) 5,134명 * 지원사항 ('17) 건강검진 → ('18) 건강검진, 확진 지원, 출장검진
청년	생활안정	• 주거안정(2.2만호 → 2.8만호) – (주택공급)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대상,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행복 70%, 매입,전세임대 30~50%) – (기숙사) 캠퍼스 내외, 행복(공공 · 연합) · 민간기부형 등 다양한 유형, 관계기관 협업 등 통한 부지 확보 등 추진 * '17~'18년 추진실적 : 29,166명(실입주 14,450명) • 금융 · 재정 지원 – (임차보증금) 만34세 · 연소득 3.5천만원 이하 中企 재직자 대상 융자 지원 ('18년 247억원 → '19년 831억원), 한도 확대(3,500만원 → 1억원) – (주택청약)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확대(한도 500만원)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소득 2천만원 미만, 재산 2억원 미만 청년 최대 150만원 지급, 연령요건(30세 이상) 폐지('19) – (교통비) 산단내 中企 재직 청년 대상, 월 5만원 지원 ('18. 15.4만명)

대상	분류	지원정책
청년	취업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중소 · 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최대 900만원 지원(최대3년) 청년채용 인원: ('16) 13.8만 → ('17) → 15.8만 → ('18) 22.9만명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 · 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 지원 ('17) 4.5만 → ('18) 15.4만명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 대학 졸업후 2년내 구직활동 지원(월 50만원, 최대 6개월) • **청년희망키움통장 5000명 → 10000명** – 생계수급 저소득층 청년(15~34세, 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0%이상)의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탈수급시 1,440만원)
	교육비 부담 경감	•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133억원) • **'22년까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18년 사립대 입학금 약 20% 인하(약 582억 원)) • **반값등록금 지원 확대** – 사립평균등록금 절반(368만원) 이상 지원대상 확대 : ('17)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57만명) → ('18) 120% 이하(69만명) • **다자녀 장학금 확대** ('17) 셋째 이상 자녀(5만명) → ('18) 다자녀 가구 전체 대학생(17만명)
가족	주거지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3만호 → 4.3만호) – (국민임대) 평균소득 70% 이하 (행복주택) 평균소득 100% 이하 (매입,전세임대2) 평균소득 100% 이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여 • **신혼부부 자금융자 확대** (4.3만가구 → 8만가구) – (구입자금) 혼인기간 5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2.2억원(2자녀 2.4억원) – (전세자금) 혼인기간 5년이내,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수도권 2억원/지방 1.6억원
	출산	•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30%, '17.10월) – ('18) 중위소득 130%, 최대 4회 → ('19) 중위소득 180%, 최대 10회 시술비 지원 ('18. 47억원 → '19. 184억원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유급3일+무급2일 → 유급10일) – 배우자가 출산을 한 근로자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 중 5일분 급여 지원(통상임금 100%, 상한 월200만원) •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 출산급여 지급**(90일간 월 50만원, '19) •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한도200만원)

대상	분류	지원정책
 중.장년	일자리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19) 신규 2,500명 지원 – 경력 및 전문성 갖춘 만 50세 이상 퇴직자 –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18) 2,000명 → ('19) 5,000명 – 신중년 구직자를 적합직무에 정규직 채용한 중소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월80만원, 중견기업 월40만원
	일과삶균형	•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 기업 ·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추가 지원 ('18년 2만명 → '19년 8만명) ※ 분담비율 : 근로자 50%(20만원), 기업 25%(10만원), 정부 25%(10만원) • **도서 · 공연비 소득공제**('18.7~), **박물관 ·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19.7~)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해당 비용에 30% 공제(추가 100만원 한도)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18)6,642명 → ('19)1만명 – 만50세이상 퇴직자 중 사회공헌 희망자 – 참여수당 2천원 / 시간, 실비 8 → 9천원/일 지급
	전직지원	•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제공** ('17)23,009명 → ('18.11)28,112명 → ('19)3만명 •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18) 300명 → ('19) 500명, 신중년 기초 ICT 직업훈련('18) 1,327명 → ('19) 2,000명 신중년 폴리텍 캠퍼스 ('18)10개 → ('19)14개
 어르신	일자리	• **공익형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19년 7만개 확대(월30시간, 27만원) • **사회서비스형 :** 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2만개 신설 (월 최대 66시간, 70만원 수준) • **시장형 :** 60세 이상, '19년 1만개 확대(시장형사업단 연 210 → 230만원)
	생계 보장	• **기초연금 인상** ('18.9월) 최대 25만원 → ('19.4월) 소득하위 20%월 최대 30만원 •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비(월 최대 11,000만원) 감면('18.7월)**
	요양 · 돌봄	• **65세 이상 노인 틀니('17.10월) · 임플란트('18.6월) 본인부담 인하** 50% → 30% •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17.9월) 20~60% → ('17.10월) 10% • **치매안심센터 정식 개소** ('18) 166개소 → ('19) 254개소 •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261개소)** •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종사자 9600명 → 11800명) – 종사자 ('18) 9,600명 → ('19) 11,800명) – 주2회 전화, 주1회 방문 등 안부확인, 복지서비스 연계 • **노인 장기요양보험 확대** –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대상 재가 · 시설 급여 및 가족요양비 등 지원 ('18년)67만1000명 → ('19년)77만3000명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대책

인건비	① 월보수 210만원 이하 상용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일안자금) – '19년에는 5인미만 사업장 우대 지원(월 15만원, '19년)
사회 보험료	① **근로자 1~9인 사업장**(두루누리사업) : **납부액의 80%~90% 절감** – 대상확대 : 월보수 ('18) 190만원 → ('19) 210만원 미만 – 지원비율 유지 : ('18) 80~90%(신규가입시) → ('19) 동일비율 적용 ② **1인 소상공인**(근로자無) – 고용보험 : 보험료 30~50% 지원 – 산재보험 : 가입 허용업종 확대(제조업 8개 분야, '18. 1) → 음식업 등 서비스업 추가, '19)
카드 수수료	① **우대수수료율** 적용확대 – (0.8%) 연매출 2→3억원 이하, (1.3%) 3 → 5억원 이하 – (온라인 판매업자, '19) 3.0% → 1.8~2.3% – (개인택시 사업자, '19) 1.5% → 1.0% ② **소액결제 업종의 수수료 부담 완화**('18.7) : 연 200~500만원 절감 ③ 0%대 수수료의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제로페이) 시범실시('18.12)
세금	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대상 8/108 → 9/109로 상향 **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확대(5%p, '19) ② 의료비 · 교육비 등 **세액공제 대상 확대** ③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상향(500 → 1,000만원,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19) ④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 인상(연매출 2,400 → 3,000만원 미만, '19) ⑤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19) – 연령요건 : 30세 이상 → 폐지 – 재산기준 : 1.4억원 미만 → 2.0억원 미만 – 소득요건(만원) : (단독)1,300 → 2,000, (홑벌이)2,100 → 3,000, (맞벌이)2,500 → 3,600
임대료	① **환산보증금 상향** : 전체 임차인의 약 95% 보호 ② **보증금 ·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 **9% → 5%** ③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 **5년 → 10년** ④ **지역상권법 제정 추진** : 건물주 · 임차인간 상생협약체결 상권을 집중지원 ⑤ 전통시장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 대규모 점포 등록 776개 시장
재도전 지원	① 사업장 **폐업 · 철거 지원** 강화('18, 최대 100만원 → '19, 200만원) ② **전직장려수당** 인상('18, 75만원 → '19, 100만원) ③ **구직촉진수당** 지급('19) : 월 30만원 한도, 3개월간 지급

관계부처합동